

부산·울산·경남 다시 손잡았다… ‘하나의 생활·경제권’ 시동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회동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4대 성장엔진 중심 경쟁력 강화

부산·울산·경남이 민선 9기 첫 시도지사 회동을 계기로 초광역 협력체계 재가동에 나섰다. 산업과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광역교통망과 관광벨트 등 핵심 현안의 국비 확보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일 부산웨스턴조선호텔에서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옥 울산시장,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3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 추진체계 구축, 초광역 발전전략 수립, 5급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 주요 현안 및 협력사업 국비 확보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완수(왼쪽부터) 경남도지사, 김상옥 울산시장,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턴 조선 부산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3개 시도는 선언문을 통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추진체계 로드맵 마련, 초광역 발전전략 및 5급3특 성장엔진 공동 수립,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핵심 현안 및 국비 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부울경 초광역 발전전략에는 산업이 연결되고 생활이 이어지며 행정과 재정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부울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분야 12개 전략과제가 담겼다.

경제권 분야에서는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 투자기반, 시설을 초광역으로 연결해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권역 전체의 경제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생활권 분야에서는 주요 거점 간 기능 분담과 연결을 강화하고 생활서비스 공동 이용을 확대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일 생활권을 구현하기로 했다.

추진체계 분야에서는 경제권과 생활권의 핵심 과제를 부울경이 함께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초광역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3개 시도는 올 하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는 ‘5급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통해 부울경이 남해권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조선·해운, 미래 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대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내년 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정부 예산안 심의와 주요 국가계획 반영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공동 국비확보 대응단’도 가동한다.

공동 대응 핵심사업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광역간 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동남권 관광벨트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울경 협력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산시

하양 동서지구 침수 개선 추진

경산시는 하양 동서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서지구는 하양읍 동서리와 외촌면 용천리 일원으로, 하천 합류부 저지대 지형에 따른 구조적 배수한계로 집중호우 때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가 반복돼 왔다.

경산시는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고 지구 내 유입수로 3.15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교육청

라오스에 도서 3500권 기증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응비관에서 ‘2026년 해외 도서기증식’을 열고 라오스 현지 학교와 도서관 등 5개 기관에 한국어 교육 도서 3500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북교육청 소속 27개 공공도서관이 모두 참여해 도서를 마련했다. 기증 도서는 ▲라오-한국대학 유·초등학교 ▲비엔티안중학교 ▲라오스국립대학 ▲라오스 국립도서관 ▲로고스 외국어학당에 전달돼 한국어 학습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포항시

주한 인도대사와 교류 확대 논의

고랑탈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가 8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박용선 포항시장과 청년·교육, 산업·경제 등 양측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취임한 박용선 시장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양측이 쌓아온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과 다스 대사는 이날 문화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청년·교육과 산업·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와 인도는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우호관계를 이어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경주시

원전 소재 지자체 협의회 개최

경주시는 8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공동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5개 지자체는 원전 지역의 의견이 정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주민 권익과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북도, 첨단산업 인재 3000명 양성

초광역 공유대학 사업 등
국비 최대 960억 확보

경북도가 성장엔진 인재 양성과 초광역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국비 최대 960억원을 확보하고 반도체·로봇·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모한 성장엔진 인재 양성 과제에 금오공대가 주관하는 ‘Physical AI(반도체+로봇) 분야 인재 양성’이 전국 6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4년간 국비 600억원을 지원받는다.

대구·경북 8개 대학과 지역기업, 구미 전자공고 등이 참여해 산학 연계 교육과 취·창업 지원,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대경권 혁신 인재 3000여 명을 양성할 계

획이다.

경북도는 경북대, 대구시와 함께 반도체·로봇·이차전지·모빌리티·바이오 등 5대 전략산업 분야 초광역 공유대학도 운영한다. 올해 대경권 국비 152억원 가운데 90억원을 확보했으며 4년간 총 36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와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역에서 머물며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경북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하고 확보한 국비와 앵커 사업비를 활용해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랫츠런파크 모습.

영천경마공원 개장… 말산업 거점 시동

오는 13일 개장식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영천’ (영천경마공원)이 13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장은 2009년 12월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지 17년 만으로 경북에서 최초로 국내 네 번째다.

개장식에는 정부·국회·지자체·한국마사회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천경마공원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관람대와 마사 100칸, 동물병원, 수변공원 등을 갖췄다.

경마공원은 개장 이후 순회 경마를 72

경주에서 시작해 180경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주 경마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미개발 잔여부지 24만평에 1200억원을 투입하는 2단계 시민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공공부문 등에서 총 6549억원이 투입됐으며, 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경마공원역 조성에 3541억원이 들어가 전체 투자 규모는 1조 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경마공원에서 나오는 레저세는 전액 도세(道稅)다. 내년부터 연간 340회 정도의 경기가 열리면 연 510억~680억원 정도의 도세가 확보된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공공기관 채용

14곳서 111명 인력 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14곳의 신규 인력 111명을 통합 채용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14곳의 올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절차로 오는 11월 14일 동시 필기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올 7월 1일 시·도 통합 이후 첫 공공기관 채용으로 채용 규모는 총 111명이다. 종전 광주 공공기관으로는 광주교통공사, 환경공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 체육회 등 6곳에서 90명을 뽑는다.

전남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남도장터, 청소년미래재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등 8

곳에서 21명을 채용한다.

다만 통합 후속 절차로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채용 폭은 크지 않다.

통폐합 대상 기관은 법정 의무 인력인 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에 한해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 통합대상이 아닌 기관은 필수 인력 중심으로 채용한다.

채용 예정인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0월 사이 각기 채용 공고를 낸다. 시는 지역별 응시자 수 등 응시 현황에 따라 시험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이후에는 면접 시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임용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채용부터는 종전 광주와 전남의 판이한 채용·연수 기준 등도 통합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창원시, 전기차 2101대 추가 보급

수요 반영해 3차 사업 예산 확보

창원시는 오는 11월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2101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2차 사업으로 이미 3041대를 보급했으나, 계속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추경으로 3차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차종별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 1800대, 전기 화물차 250대, 전기 승합차 48대, 어린이 통학 차량 3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등이며 선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차량 구매를 원하는 시민이 먼저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맺으면, 이후 제작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차량가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등에는 별도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